

- 경제 청문회 시기에 맞추어 김영삼 구속수사와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구속자 석방 요구(나라를 망친 김영삼을 구속하고 이에 저항한 양심수들의 수배해제, 구속자 석방, 군문제 해결을 요구)
-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철회하고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는 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폭넓게 벌여 2월안에 올바른 인권법이 마련되고 2월 25일 취임 1주기에 인권법이 공포되고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한다.

3) 2월 초부터 2월25일까지(집중 투쟁기)

-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 올바른 인권법 제정,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강제하기 위한 집중 투쟁을 진행합시다.
- 민가협, 수가협을 중심으로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는 매일 선전전과 같은 집중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합시다.
- 특별사면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이속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 진행
-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인권운동 사랑방등의 인권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각종 집회와 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여낸다.
- 총력투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 결정

3. 제안

1월 14일 박종철 열사 12주기 추모제

제목:(가칭)열사 정신 계승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99 신년 인권 대회

주최:유가협,민가협, 추모단체 연대회의등의 단체들이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1월 14일 여의도 국회앞

각 인권단체 어르신들과 깊이 상의 드리지 못하고 제안드림을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열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법무부와 대화 경과 보고

본 농성단은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의 차원에서 구 정권하의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총 65명)들의 수배조치를 지체롭게 해결해보고자 명망 있는 사회인사들로 구성된 '수배해제 대책위1)'를 구성하여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관계자(한화갑, 정균환,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박영관 검찰3과장 등)와 수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 일에는 유가협(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단이 준비한 자료와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수배자 부모님들의 친필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 유시춘,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와 수 차례의 논의를 진행
-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 면담(8월 12일)
- 법무부를 방문하여 박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수배자 부모님 탄원서 제출
- 대책위 분들이 박상천 법무부장관, 이기문(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원을 면담하여 법무부 입장을 확인(9월 18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이기문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 담당 공안 검사의 만남을 통해 우리 농성자들에게 통보된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진출두 하여 수사를 받을 것
- 2) 반성을 전제로 하여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수배해제 이후 한총련 일에 개입하지 말 것
- 3) 국법질서를 준수할 것
- 4) 2),3)의 내용을 형식에 상관없이 표명할 것
- 5) 위의 사람 중에 죄목에 따라 선별처리 한다. 선별처리 기준은 한총련 이외의 조직사건 관련자, 이적표현물 배포 관여자, 폭력시위 관련자, 그러나 선별처리 기준은 유동적으로 협의 할 수 있다.

- 대책위, 수가협('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약칭) 분들이 한화갑(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이기문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화갑 원내총무는 수배해제의 문제를 당내에서 토론에 부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주례 보고 하겠다고 함(10월 16일)

- 유가협이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단의 활동과 입장

1) 대책위원;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의장), 함세웅 신부님(천주교인권위원회), 홍근수 목사님(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님, 이덕우 변호사님
 대책위 집행위원; 오영식(전대협 2기 의장, 전대협 동우회 회장), 김재용(한총련 1기 의장)

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고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던 이강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한 답신을 주겠다고 함(10월 20일)

- 진현구 공안부장과 공안기획 3과장과 진관스님, 김재용(한총련1기 의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진행(11월 27일)

공안부의 입장

'법의 원칙, 법적용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의 법적 기준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인 형태보다도 개인적으로 출두하여 '준법의지를 밝히는 등 수사에 성의를 보인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함.

☞ 농성단의 입장 : 공안부 입장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자체 판단함

- 12월 둘째주 수차례에 걸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국민회의 방문시의 약속사항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님의 농성단 방문 (12월 18일), 농성단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짐. 국민회의의 종전입장 전달, 하지만 공안부와 직접토론자리 주선하겠다고 약속함. 또한, 이후 계속 대화를 갖기로 함.

◆ 수배해제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기 위한 우리의 입장 ◆

1. 자진출두 기간을 정하고
2. 기간내에 출두하는 수배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3. 출두자 전원에게 기소유예 방침을 내린다.
4. 자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 소회를 밝힌다.

장기간의 수배, 도피 생활은 일상에 대한 갈망으로 접철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수배해제가 된다면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학교생활로 돌아가 못다한 학업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올바른 법이라면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소회는 순수한 양심의 표현입니다. 저희들의 양심의 표현이 준법서약서를 쓴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반대합니다. 저희는 민주시민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껏 살아갈 것입니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 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제 사회단체 어르신께 무인년의 끝에서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1년여의 양군모 투쟁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 농성단이 부족하여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1999년 새해에는 좀더 노력하고 열심히 투쟁해서 김대중 정권 취임 1주기가 되기전에 반드시 승리의 벅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저희 양군모를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질책 또한 아끼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사회단체 여러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활동 경과보고

1) 97년 12월 - 98년 1월까지

- 97년 12월 말경 양군모 준비 모임 : 활동의 정당성 및 필요성 합의
- 98년 1월 22일 전국 지역주체 모임을 통해 양군모 결성

2) 98년 3월 - 7월까지

- 3월 26일 양군모 회원 1차 탄원서(100부) 청와대 발송
- 5월 22일 중앙 병무청 정모국장 면담 :
“법개정 문제이므로 행정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 확인
- 6월 - 7월 교수님 탄원서, 사회단체 서명운동 전개

3) 98년 8월 - 9월까지

- 8월 본격적인 국회 활동 : 국민회의 앞 아침출근 투쟁 전개(1개월 동안)
- 9월 4일 당정협의 실시 : 남궁 진 국민회의 제 1 정책조정위원장에 의해 안전 상정
-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 논의 유보됨

4) 98년 10월 - 11월

- 10월 22일 중앙 병무청 항의 방문 : 회원 5명 징집영장 반납, 회원 86명 부당징집 거부 연서 전달
23일 영장 반납자 조계사 무기한 농성 돌입
- 11월 3일 병무청 국정감사때 장영달 의원 양심수 군문제 해결 절의

: "검토하겠다"는 병무청장의 답변

21일 조계사 수배해제 - 양군모 활동 중심으로 '열사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를 국민회의 앞에서 진행

23일 남궁진 의원 면담 진행 (이창복 의장님과 동행)

23일 국방부 아침출근 항의 선전전 전개

■ 11월 26일 당정협의 : 남궁진 의원과 장영달 의원에 의해 양군모 해결 제 요구됨

-> 국방부와 병무청에 해결안 마련 후 보고하도록 지시함

5) 98년 12월

■ 12월 1일 국방장관 면담 제 요청 : 국방부 인력관리 과장 면담으로 대체 되었고, 대통령이나 국회차원의 합의 없는 상태하에서는 군문제 해결 의지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 확인

4일 국방부 규탄 및 정상적 사회복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국방부 장관에 항의서한 전달

■ 12월 5일 양군모 농성단 10인 전체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 단식행위

■ 12월 14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 국회 청원 접수 - 장영달 의원 소개, 국회의원 51명

2. 양군모 1-2월 활동 계획

양군모는 인권법 제정 정국을 중심으로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제 사회단체와의 공동 연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배, 구속, 징집으로 이어지는 제반 양심수의 문제를 완전 해결(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하고 그 법적, 제도적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책임있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군모 투쟁은 정치적 해결과 함께 법개정이 병행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투쟁입니다. 때문에 국회청원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국방부를 압박하여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것이 투쟁의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조계사 농성단의 힘있는 투쟁으로 2월 25일 취임 1주기까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청원 성사와 국방부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양군모 전체 총회

□ 의의 : 농성단 위주로 전개되어왔던 1년여의 양군모 투쟁을 총화하고, 신년 투쟁을 회원 전체와 함께 결의하는 장입니다.

: 양군모 투쟁의 결정적 분수령을 맞아 회원 전체의 통일적인 인식에 기반한 대중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하는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 신년 국방부 투쟁을 선포하고 대중 투쟁과 연계하여 총회를 진행합니다.

□ 일시 : 1월 7일(목) 늦은 5시 장소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2) 국방부 출근투쟁과 집중투쟁

- 의의 : 양군모 투쟁 승리의 관건은 국방부를 압박하여 투쟁의 정당성을 합의하고, 국회 청원이 통과된 후 국방부측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투쟁입니다.
: 정권의 위기국면마다 정치사찰과 군내 조직사건 조작 등으로 청년 양심수들을 탄압해 왔던 국방부에 대해 전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항의/ 규탄하는 투쟁입니다.
: 양군모 투쟁은 수차례에 걸쳐 선례가 분명한 투쟁임에도 행정편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강제 징집 등으로 양군모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청년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투쟁입니다.
- 방도 : 1월 8일 국방부 총력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아침 출근 항의방문과 선전을 전개합니다.
: 제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국방부앞 대중 집회 투쟁을 전개합니다.

3) 청년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제 사회단체 성명서

- 목적 : 국회 청원을 통과 시키기 위해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는 투쟁입니다.
- 방도 : 양군모 농성단의 연대사업국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가능한 제 사회, 민주단체가 함께 해주시면 합니다.
- 기간 : 1월 11일 - 15일의 1주일 기간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총화방도 : 신문광고(한겨레 1월 18일), 국회항문 전달, 언론사 발송 등으로 총화합니다.

4) 청년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 서명운동

- 목적 : 학생운동 시절 정치적 탄압에 의해 구속된 학생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요구하는 투쟁이므로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힘으로 국회와 국방부 양군모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 방도 :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소 1000인 이상 교수 서명을 조직화
- 기간 : 1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 총화 : 서명 총화 기자회견이나 교수 대표단 국회 방문을 통해 총화합니다.

5)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 연대투쟁

인권법 제정 국면과 맞물려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해제, 청년 양심수 군문제 해결이라는 당면 인권문제의 해결과 양심수 문제의 법적 근원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제 사회단체, 인권단체와 공동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내오고 책임있게 사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 추후 제출)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8	2/2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총 2 쪽)

내 용: 대검 공안부의 선별 구속 방침에 대한 조계사 농성단 입장

발 신: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 242일째

(오창규 · 吳昌圭 7:2-6880, 1/ 인터넷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free66>)

대검 공안부의 선별 구속 방침에 대한 조계사 농성단 입장

240일이 넘는 끈질긴 투쟁으로 우리들은 대통령, 국민회의, 법무부로부터 수배해제에 대한 약속을 단아냈다. 이 약속의 핵심은 수배지들에 대한 인신 구속없이 기초적인 절차를 거쳐 도피중인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대통령은 “도피중인 사람에게도 해방을 주겠다” 고 약속했으며, 집권여당인 새정치 국민회의는 “구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64명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약속했고, 박상천 법무부 장관도 “최대한 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겠다.” 고 약속했다.

우리들은 대통령, 국민회의, 법무부의 약속을 믿고 출두를 빈틈없이 준비했다. 검거의 위협을 무릅쓰고 연락 가능한 모든 수배자들에게 출두 준비를 요청했고, 18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출두서류 준비도 서둘렀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출두날짜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한편으로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께서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한 불구속에 기소유대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올렸고, 대한 불교 조계종 중앙 종회가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목사님, 신부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 각계 사회단체 어르신들이 출두 시에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3월 30일 20여명의 부모님이 모여 1차 출두 일정을 잡으려는 순간 대검

공안부가 대통령과 국민회의, 법무부 장관의 수배해제 약속을 뒤집고 몇 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공안부가 선별구속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구 정권 시절 수배해제 문제는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출두를 준비하던 많은 수배자들이 또다시 기약없는 수배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많은 민주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법무부 장관까지 약속한 수배해제 문제를 일선 공안검사들이 이토록 간단히 무시하고 뒤집을 수 있는가? 수배해제 한다면서 어떻게 선별구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선별 구속은 수배해제가 아니다. 우리들은 수배해제를 요구한 것이지 단순한 법적 선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몇몇 사람은 구속시키고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자진 출두자에 대한 일반적 법 절차이지 정치적으로 수배해제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수배해제 약속을 믿고 자진 출두할 사람들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대검 공안부의 비상식적인 선별구속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대검 공안부의 선별구속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절대 자진출두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들은 자진출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대검 공안부의 선별구속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수배자 가족협의회와 민가협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분노에 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각계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여 나갈 것이다. 종교계, 학계, 재야 민주인사들에게 널리 알려 대검 공안부의 선별 구속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사회 여론을 폭넓게 형성해 나갈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검 공안부의 선별 구속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심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책임은 대검 공안부에 있다. 또한 국정을 책임진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검 공안부는 선별 구속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수배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대검의 선별구속 방침을 철회시켜라.

1999년 4월 7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인권 자료실	
분류기호	자료번호
B8	28

보도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총 3쪽)

내용 : 박상천 법무부 장관 국회 의원실 농성자 강제 해산 중 어머니 기절
‘책임있는 치료와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국민회의 당사 항의 시위’

발신 :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 협의회

유철근(兪哲根 · 56 · 상업) / 장재옥 (將在玉 · 54 · 상업)

732-6880, 1/ 017-205-8518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free66>

‘정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자 가족 15명이 26일 국회 박상천 의원실 (국회 의원회관 724호, 788-2360)에서 항의 농성중인 것을 국회 경비대 50명이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장희수 어머니가 기절하는 등 여러 어머니들이 몸에 상처를 입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배자 가족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27일 오전 10시 40분경부터 국민회의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책임있는 인사와 면담과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영만 검사와 오전 11시경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사면 발표에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에 대해 ‘자수하여 법을 지켰다는 약속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 비서관들은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 시키기 위해 철문을 잠그고 오후 6시경 50여명의 경비대가 부모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냈습니다.

부모들은 ▲ ‘자수하라’는 것은 자식들은 자진 출두하여 48시간 안에 간단한 기초수사만 진행하고 서류정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인데 양심수인 자식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며 ▲ ‘앞으로 법을 지켰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은 자식들이 간단한 조사과정에서 자술서에 개인의 소회를 밝히는 것이지 악법을 지켰다는 준법서약서도, 탈퇴서도, 반성문도 아니며 ▲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은 원칙적, 최대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의 진의를 알고 싶고 수배자 70여명 전원에게 대해 선별처리가 아닌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를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의 내용을 책임 있는 인사가 확답해 준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딸들과 함께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구정권하 수배자들의 수배해제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기
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새정치 국민회의에 보내는 항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실신시키고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힌 새정치 국민회의는 즉각 사과하라!!!

자식들의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국회 박상천의원실에서 항의농성하던 어머니 15 분이 강제 해산되었다. 늙으신 어머니들 몸에는 곳곳에 상처가 남았고 장희수 어머니는 실신해 여의도 성신병원에 실려갔습니다.(한겨레 신문 2월 27일자 23면)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203일째 9명 수배자들이 농성을 벌여왔다. 기나긴 투쟁으로 청와대와 국민회의도 수배해제를 약속하였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취임 1주기 특별사면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런데 2월 22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사면대상자 발표에서 수배해제에 대해 애매하게 언급하여 부모님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애매한 그 발표에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부모들은 경원대 신은경, 강남대 공혁준 학생의 집에 보안수사대 형사가 찾아와 '수배해제가 안되었으니 빨리 자수시키라' 협박해 또 한번 절망을 빠졌다. 부모님들은 수배해제를 약속한 국민회의 이기훈 인권위원장을 만나러 갔으나 인권위원장마저 법무부와 협의후 선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다.

이에 부모님들이 2월 26일 11시 30분경 15명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박상천 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갔다. 선별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63명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책임있는 인사와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상천 의원 보좌관은 이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문을 잠근 채 부모님들을 빨리 내보내려고만 했다. 항의 농성은 계속되었고 저녁 6시경 경비대 50여명을 동원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강제로 회관밖으로 내쫓았다.

이 과정에서 장희숙(김현근의 모) 어머니는 실신하여 응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여러 어머니들이 타박상과 찰과상을 당했다.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울부짖는 어머니들을 경비대들이 끌어당기고 밀쳐내며 들어내다시피 의원회관 밖으로 쫓아냈다. 의원회관은 어머니들의 울음소리와 눈물로 뒤범벅되어 흡사 군사독재 시절 백골단의 만행을 연상케 했다.

뿐만아니라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진 장희숙 어머니를 응급실에 방치하고 의원비서관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는 어머니를 밤새 응급실에 방치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계속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방치하더니 새벽에야 뇌파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입원수속을 했던 의원보좌관이 없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50년만의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인권 정부를 외치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집권여당인 국민회의 당직자가 직접 지휘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실신시키고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힌 이 사건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폭거이다.

이에 우리 조계사 농성단은 새정치 국민회의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1. 책임있는 당직자(한화갑 원내총무)가 이에 대해 부모님께 사과하라!!!
- 2. 응급실에 방치된 장희숙 어머니를 책임있게 치료케하고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 3. 책임있는 당직자(한화갑 원내총무)가 63명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확약하고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1999년 2월 27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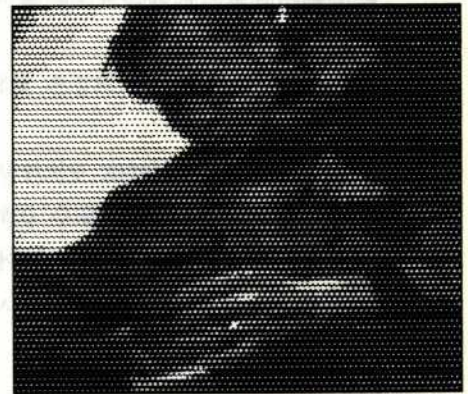
<한겨레 신문 2월 27일자 23면 기사>

강제해산 당한 수배해제 요구

박법무 의원 사무실 농성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안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의원사무실에 학생운동 수배자의 가족 15명이 들어가 수배해제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저녁 7시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들은 박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학생운동 수배자의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조치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울 조계사에서 정치수배 해제를 주장하며 20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운동 수배자의 부모와 가족들이다. 경찰은 이들을 밖으로 끌어냈으며, 이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장희수(59.여)씨가 기절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본영기자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영남, 최원근, 이준희, 유동원, 권영숙, 안영진, 최영희, 김대일, 최승호)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전화 732-6880,1 / Fax 732-0240

문서번호: 농성단 제 99-2-27

시행일자: 1999. 2. 27

수 신: 각 사회 단체

세 목: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법무부장관 박상천 국회의원실 항의방문 경과보고

법무부장관 박상천 국회의원실 항의방문 경과보고

1.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해결에 항상 매진하시는 귀 단체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 농성단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도 203일째 이릅니다. 어제 저희 부모님은 확실한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15명이 26일(이제) 11시경부터 국회의원회관 법무부장관 박상천 의원실에 항의 방문을 전개하다가, 오후 6시경 국회경비대에 의해 어머니 한 분이 실신까지 당하시며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귀 단체에 올바르게 알리고자 합니다.

3. 몇몇 신문에서는 수배해제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정작 수배자의 집으로는 형사들이 찾아와 "이번 사면에는 수배해제가 없다. 자수해서 한총련 탈퇴서를 쓰면 50일 후에 나오게 되니 하루빨리 자수를 시켜라"는 등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지시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일선 실무자들을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배해제에 대해 확약을 받고자 부모님들이 나서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도피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밀만 믿고 자식들이 수배해제 되기만을 에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답답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어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자식들을 위해 항의방문에 나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지만 이러한 부모님들의 에타는 마음을 비서관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무참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비서관들은 농성과정 내내 부모님들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결국 국회 경비대를 동원하여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 때 실신하신 부모님 한 분은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저희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만드시 정치수배해제를 완전히 쟁취함으로써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함께 공분을 모았으면 합니다.

4.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1. 국민회의에 보내는 항의서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김현곤, 이창희, 엽동렬, 김성숙, 한유진, 유병문, 김대성, 홍춘호)

<별첨자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실신시키고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힌
세정치 국민회의는 즉각 사과하라!!!**

□ 강제해산 당한 수배해제 요구
 지사들의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국회 비상천의원실에서 항의농성하던 어머니 15 분이 강제 해
 신되었다. 늙으신 어머니들 몸에는 곳곳에 상처가 남았고 장희수 어머니는 실신해 여의도 성신병
 원에 실려갔습니다. (한겨레 신문 2월 27일자 23면)

203일째 자식들의 농성과 부모님들의 기나긴 투쟁으로 청와대와 국민회의도 수배해제를 약속하였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취임 1주기 특별사면 난관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런데 2월 22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사면대상자 발표에서 수배해제에 대해 애매하게 언급하여 부모님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애매한 발표에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부모들은 신은경, 공혁준 학생의 집에 보안수사대 찾아와 '수배해제가 안되었으니 빨리 자수시키라' 협박해 또 한번 절망을 빠졌다. 국민회의 이기문 인권위원장마저 법무부와 협의후 선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다.

이에 부모님들이 2월 26일 11시 15명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박상천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갔다. 63명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책임있는 인사와 면담을 요구했다. 의원 보좌관은 이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문을 잠근 채 부모님들을 빨리 내보내려고만 했다. 항의 농성은 계속되었고 서녁 6시경 경비대 50여명을 동원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강제로 회관 밖으로 내쫓았다. 의원회관은 어머니들의 울음소리와 눈물로 뒤범벅되어 흡사 군사독재 시절 백골단의 만행을 연상케했다. 이 과정에서 장희숙(김현곤의 모)어머님은 실신하여 응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여러 어머니들이 타박상과 찰과상을 당했다.

뿐만아니라 의원비서관은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진 후 머리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어머니를 밤새 응급실에 방치하였다. 의사들도 방관만 하더니 새벽에야 뇌파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입원수속을 했던 의원비서관이 없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50년만의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인권 정부를 외치는 김대중 정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회의 당직자가 직접 지휘한 이 사건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폭거이다.

1. 국민회의 책임있는 당직자는 이에 대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2. 국민회의는 응급실에 방치된 장희숙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3. 책임있는 당직자(원내총무)가 63명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확약하고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1999년 2월 27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전화 732-6880,1 / Fax 723-9120 / http://myhome.netsgo.com/free66

문서번호: 농성단 제 99-2-28

시행일자: 1999. 2. 28

수 신: 4 사회단체

제 목: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과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연대집회 참가요청 건

1.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해결에 항상 배진하시는 귀 단체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 농성단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204일째 이릅니다.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어르신과 여러 인권 및 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3월 4일 '구정권시절 정치수배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기자회견'과 5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연대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 대표님과 회원분의 많은 참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200여 일간 저희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회단체와 각계원로, 정치권의 노력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국민회의 당론으로 저희의 정치수배 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의 '22일 대통령 취임1주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은 저희 수배해제 문제에 대해 고압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은 "몇 명은 구속되어야 한다"는 등 선별처리를 이야기하거나, 부모님에게 찾아와 "이번에 수배해제는 안된다"라는 협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고자 부모님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법무부 장관 박상천의원 사무실에 찾아 갔으나 국회경비대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님중 한 분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이런 비상식적인 폭력에 대해 부모님들은 다음날 국민회의와 법무부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으나 저희의 수배해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농성단은 63명 전원이 모두 수배해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4. 이번에 반드시 정치수배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구정권시절 정치수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기자회견과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집회 기획안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김현곤, 이창희, 엽동렬, 김성숙, 한유진, 김대성, 유병문, 홍춘호)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8	네

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님 (총 3쪽)

내 용: 11일 오전 10시 **'수배자 어머니들의 법무부 항의시위'**

오후 2시 탑골공원 민가협 목요집회 이번주 주제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발 신: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 뚝촌 732-6880, 1/ 인터넷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free66>)

취재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일부터 수배자 부모 10여명이 법무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3.1절 특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수와 준법의지를 밝히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혀 이는 수배해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들은 3.1절 특사에서 수배해제가 제외된 것에 항의하고 다시한번 수배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성사되지 않아 항의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들은 오전 10시 과천 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손마이크와 '정치수배해제'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법무부에 호소할 것입니다.

처음 이를 동안 어머니들은 '정치 수배해제 · 양심수 석방'이라고 적힌 어깨띠와 선전판을 들고 법무부 민원실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6일에는 출입문을 막아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8일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신 부모님들을 전경들이 팔을 꺾어 들어내는가 하면 어머니들이 들려나오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숙자 어머니(유병문 어머니)가 손과 어깨에 멍이 들었습니다.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하러 온 시민을 강제로 끌어낸 법무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어머니들은 들을 들어 철문을 두드리는 등 2시 20분까지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조계사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요청서

“수배해제 한다면서 선별구속 웬말이나 박상천 장관은 물러가라”, “63명 수배자 전원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약속하라”, “수배자를 가족의 품으로”

어머니들은 바람 차갑고 횡한 종합청사 출입 계단 앞에서 전경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선 앞에 주저앉아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터뜨립니다. 4시간동안 그곳에 앉아 있다 보면 목은 따끔거리고 온몸이 얼얼해집니다. 어머니들을 추운 곳으로 쫓아 낸 전경들을 피해 다른 계단으로 옮겨 보기도 하지만 금새 전경들이 따라와 어머니들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더큰 죄를 지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려했던 자식들이 아직까지도 조계사에서, 거리에서 갇혀있는 것이 억울해서 울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힘겨운 항의시위를 마치고 조계사로 돌아오는 지하철 4호선, 1호선 안에서도 어머니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 수배 해제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말을 걸어오는 시민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종각역에서 조계사로 들어오는 길에도 홍보시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국연합 상임 의장(오 종렬)이 되어 전국을 다니는 남편과, 수배생활 6년 끝에 조계사에서 8개월째 농성중인 아들(창규)을 둔 김 평님 어머니. 온 가족의 생계 수단인 생활 한복 가게도 남에게 맡기기도 아들의 수배해제를 위해 2월 한 달을 조계사에서 보내고도 좋은 소식이 없자 다시 3월, 조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직장에 휴가를 낸 어머니, 식당 문을 닫고 부산에서 올라 오신 어머니, 밤에는 아들 줄 반찬을 만들고 새벽같이 의상실에서 옷을 만들다가도 낮이 되면 수배해제를 위해 조계사로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 어머니.

처음엔 수배자 자식을 둔 처지에 흥금없이 사연을 털어 놓을 수 있어 서로 위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자식들의 수배해제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행동하는 투쟁 동지가 되었습니다.

2월 한 달은 12시면 민가협에서 주최하는 서울역 매일 거리 캠페인에 나가 ‘정치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휘장을 두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틈나는 대로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법무부에 면담을 신청하고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니다. 매주 목요일집회 때는 자식들의 얼굴이 담긴 선전판을 들고 탑골 공원에 왔습니
다. 각종 집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두에 서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홍보전도, 연설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 2월 26일은 박 상천 법무부 장관의 기만적인 발표에 항의하며 국회 박 상천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 회수 어
머니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88년 노태우 정권도, 93년 김영삼 정권도 단행한 바 있는 구 정권 수배자의 수배
해제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하는 현 정부 인권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
게는 7년 동안 짧게는 3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한 수배자들은 조계사에 반년
이 넘게 천막 농성생활을 했습니다. 조계사 농성 활동 중 계절이 3번 바뀌고 명절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정치 수배자들은 나라를 망친 김영삼 정권에 저항하다가 수배
자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전직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까지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일 2시 탑골공원 민가협 목요일집회 이번 주 주제는 '수배해제·양심수 군문
제'입니다.

3.1절특사에서 제외된 '수배해제'를 주제로 목요일집회가 열립니다. 수배자 어머
니가 대통령께 올리는 편지(장회수 어머니), 유병문 시 낭독, 수배자 오창규의 수
배생활, 양군모 회원 이정로씨(우석대.89학번.) 부인의 편지 등이 낭독될 예정입니
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조계사에서 마련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농성아닌 농
성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자식들의 부당한 수배를 풀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도록 기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8	213

보도 요청서

=====

수신: 각 언론 방송사 사회부
 발신: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 문치용, 723-6741)
 날짜: 1999년 2월 8일
 제목: "청년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 대표단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 별첨 「보도 자료」

▶ 활동 소개

▶ "청년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 단원 서명"서 전문
 및 참여 교수님 명단

▶ 병역외견의 논거에 대한
 「양군모」의 반박 논거

김영삼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김영삼생권 시절 정치
 적인 이유로 수배·구속되어 실행 2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
 후 연이은 군입대로 인해 또다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처지에 놓여 있는
 청년양심수 출신들의 모임입니다.

3. 양군모는 지난 해 12월 14일, 「헌법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
 형자의 제 2국민역 및 보충역 편입에 관한 청원서」를 여야 국회의원 51명의 청
 원소개로 접수했으며, 지난 1월 18일에는 116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제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
 표한 바 있습니다.

4.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청년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
 결을 촉구하는 교수단원서명"에 전국의 각 대학에서 738분의 교수님들이 참여
 해 주셨습니다. 이에 2월 8일 오전 10시 '조계사 육화관'에서 단원서명에 참여
 하신 교수님들 중 대표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

다.

5.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초하 교수님 (민교협 공동의장)
- 강정구 교수님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김진균 교수님 (서울대)
- 조희연 교수님 (성공회대)

6. 기자회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 문치용 (양군모 대표)

- 1. 양군모 활동 소개 - 문치용
- 2. '교수 탄원 서명' 취지 설명 - 강정구 교수님
- 3. 교수탄원서 전문 낭독 - 유초하 교수님
- 4. 질의 응답

7.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취임 1주기를 기해 단행될 예정인 양심수 사면·복권과 정치수배 해제에 맞추어 '출소한 청년양심수 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양심수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조치는 사회 발전에 이들의 동참을 허용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청년양심수들은 장기간의 수배와 구속 이후 30대를 전후한 나이에 또다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뒤늦게나마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하여, 금번 양심수 사면·복권과 정치수배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양심수 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에도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가 청원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주부 부처인 국방부와 병부청도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 내 농성단 ☎723-6741 나우누리 unifree

청년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 명단

강원대 황병호 외 2명	대구대 김재훈 외 1명	서강대 전준수 외 31명	전남대 나상재 외 17명
광운대 이창근 외 6명	대전대 권인호	서울대 김진균 외 111명	전북대 조순구 외 45명
광주대 박명서 외 72명	덕성여대 한상권	성공회 김명환 외 17명	조선대 이창현 외 24명
건국대 류제창 외 19명	동국대 장정구 외 33명	성균관대 박상관	중앙대 강내희
경상대 백좌홍 외 1명	동신대 김제국 외 3명	연세대 오세철 외 11명	한신대 김윤자 외 11명
경희대 조용호 외 5명	명지대 이일균 외 2명	인천대 곽광철 외 37명	한양대 강성근 외 25명
국민대 김효섭 외 1명	목원대 류종영	인천전문대 장석우 외 50명	호남대 이윤신 외 59명
고려대 안병화 외 45명	목포대 서창호 외 2명	인하대 10명	홍익대 김형욱 외 18명
단국대 박경식 외 6명	상지대 김원국 외 30명	외국어대 조규철 외 9명	

< 보도 자료 1 >

< 보도 자료 >

◆ 양군모 활동 소개 ◆

- 1998년 1월 양군모 결성. 대상자 조사 작업 시작.
- 3월 양군모 회원 1차 탄원서(100부) 청와대 제출.
- 6월~7월 교수님 68분의 탄원서, 사회단체 대표 89분의 탄원서 청와대 제출.
(상지대 김찬국 총장님 외 67명의 교수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님, 민주개혁국민연합 이창복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위의장 박순경님을 포함한 89명의 사회단체 대표)
- 8월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한달간 전개.
- 9월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이 당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국방부의 반대로 논의 유보.
- 10월 23일 징집일자 초과자들 영장 반납. 조계사 천막농성 돌입.
- 11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장영달의원이 양심수 군문제 질의
국방부 앞 항의 아침시위 돌입. (2월 6일까지 61일 동안 전개)
- 12월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의 대표청원소개와 국회의원 51명의 서명으로 병역
법 시행령 개정 청원 접수.
- 1월 "청년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제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계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116개 시민
사회단체에서 참여)
- 1999년 2월 8일 현지 조계사 천막농성 109일째.

< 보도 자료 2 >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 취임1주년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에 즈음하여**
청년양심수 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세계인권상을 수상하고, 인권정부를 표방했던 김대중 정권 시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은 존재하고 있고 특히 민주개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양심수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우려가 상존합니다.

현재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과거 김영삼 정권 하에서 수배, 구속되어 2년 미만의 수형생활을 끝마친 400여명의 청년 양심수들로서, 이들은 지난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 이미 군입영의 적령기를 지나버렸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부당징집되는 등 장기적 사회격리의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두 차례에 걸쳐 실제 복역기간이 3년 이상이 된 경우도 단일 선고량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입영해야 하며, 실형 1년 또는 1년 6월을 복역하고 자격정지 등의 제약까지 받은 대상자들 또한 입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우기 94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자 가운데는 결혼하여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으나 97년 5월에 동 시행령이 삭제됨으로써 다시 군에 입대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국관련 양심수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징집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의 수형자에 관한 조항은 지난 군사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출신 구속자들에게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와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마다 개악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과거 정권이 바뀌는 시기(80년, 84년, 88년, 93년)마다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와 함께 양심수의 군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과거정권에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 왔던 양심수의 군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 문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당정협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된 시안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 당국의 무성의와 행정편의적 반대 논리로 인해 1년이 다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14일 국방상임위 국민회의 간사인 장영달 의원의 청원 소개와 여야 국회의원 51명의 서명을 통해 청년 양심수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요청하는 요지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접수하였고 현재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맞아, 특히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에 즈음하여,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교수 일동은 출소한 청년 양심수 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양심수 사면복권 조치는 사회발전이 이들의 동참을 허용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청년양심수들은 장기간의 수배와 구속으로 20대 청년의 거의 모두를 사회와 격리된 채 보내야 했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또다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뒤늦게나마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양심수의 군문제 또한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청원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관련부처인 국방부 당국이 병역법 시행령 136조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청년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9년 2월 8일

청년양심수 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 교수 738人 일동

대표 : 강정구(동국대,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강관중(간호대)~~

유초하(충북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조희연(성공회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병무청 의견의 논거에 대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의 반박 논거 ◆

병무청 논거	반박 논거
<p>시국관련 수행자만을 위한 특혜 처분적 병역법령 개정은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 이행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의 실체는 소수 특권층과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연이은 비리에 대한 분노이지, 병역대상자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병역의무의 탄력적 적용에 대한 반감은 아니다. ○청원의 요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후 정상적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며, 이는 과거 4차례의 선례(80,84,88,94)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p>94년도 시국관련 처리전례와 같이 동일한 형량을 연령에 따라 병역처분은 형평성 결여와 공정성 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년 당시의 시행령 개정 소관부처로서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며, 당시 국민의 여망과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국회 국방상임위원회 의견서 채택의 정신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 입영적령기를 훨씬 넘겨버린 시국관련 수행자들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 탄력적 병역의무 적용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 후 정상적 사회복귀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획일적 징집을 강요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p>시국관련 수행자 관용조치 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면제 처분해야 하는 악순환 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불안정했던 정치 상황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는 것은 과거정산과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지, 담보의 악순환은 결코 아니다. ○유사한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은 관련 시행령이 일관성 없게 개정과 개악을 반복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p>이들 요구를 수용, 면제 처분시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풍조가 확산되어 한총련 같은 불법단체가 결속할 수 있는 빌미 제공과 고학력자들의 병역의무 경시풍조 등으로 국가안보 체제확리 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무청의 논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국가 행정 및 제반 업무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참여가 확대될수록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병무청의 논거는 국회 청원까지 접수된 민원사항을 대하는 행정당국의 적대적 관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p>형기를 합산하여 병역처분시에 하나의 범죄자가 다른 경미한 수행사유를 고의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소지상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인 일반인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생각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소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병무당국의 '정예자원 확보 원칙'에도 벗어나는 사람들이다.

	시행연도	소급적용시기	소집면제 보충역 편입자
1 차	80년	76.7.10 - 79.12.31	400여명
2 차	84년	80.5.17 - 84.3	400여명
3 차	88년	84.5.25 - 88.7.30	447명
4 차	94년	88.8.1 - 92.2.24	540여명

병무청 논거	반박 논거
<p>대부분 집행유예자로서 학입기회 보장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 가능</p>	<p>○시국관련 수행자들에게 의해 따르는 정치수배 기간과 장기간의 재판기간을 간과하고 있다.</p> <p>○청원의 요지도 일괄적인 군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진출이 가능한 선에서의 군복무로서, 입정 연령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제2국민역, 그 미만은 보충역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p>
<p>수형사유 면제처분은 군지휘부담 등을 고려한 입영배제 조치이며, 시국관련 수행자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 정예자원으로 입영배제대상이 아님</p>	<p>○병무청의 논거가 청원의 요지를 벗어나 있다. 우리도 누구 못지 않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할 각오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요지와 논점은 군복무 자체가 아니라 군복무 후의 정상적 사회 복귀 문제이다.</p>
<p>시국관련 수행자 면제처분시 형평성 문제 대두로 후속처리 복잡</p> <p>○기입영자(현역:13, 산업가능요원:1, 공익근무:3)와의 형평성 결여</p> <p>○시국관련 수행자 사유 군복무자 전역분제 및 전역자들의 군복무기간에 대한 보상문제 발생 우려(행정소송 등)</p>	<p>○과거 선례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기입영자들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군복무를 지속하거나 개정 시행령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 발효 이전으로 그 효력이 소급되지 않으므로 전역자들의 보상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p> <p>○후속처리가 복잡하다는 것은 병무당국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다.</p>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역법시행령의 변천사례〉

시기	구분	처분 내용	비고
유신 1기 (75. 7. 10 이전)	제2국민역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자는 죄질을 불문하고 소집면제	
5공 1기 (84. 3. 29 이전)	제2국민역	유신 1기와 같음(집행유예자 포함)	
6공 1기 (88.8.1 - 89.3.24)	제2국민역	죄질에 상관없이 1년이상 형 선고자로 2년 이상 집행유예자 면제	예외) 병역법위반자
	보충역	6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자 및 1년초과 2년미만의 집행유예자.	
6공 2기 (89. 3.25 - 95.12.6)	제2국민역	2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 선고자만 면제 - 징유자 제외	89.3.24 이전 수형자는 종전시점대도 처분
문민 초기 (94. 2. 25일)	제2국민역	형기합산 2년 이상 된 수형자, 그리고 1년 이상 형선고자로서 27세 이상인자는 징,소집을 면제, 1년이상 형선고자 중 26세 이하인자	(단, 88.8.1 - 93.2.24일 대상사중 시국사범에 법률 소급적용)
	보충역	1년 미만 형선고자는 방위소집 또는 공인근부요원 복무, 이들이 요구할때는 29세에 대학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 입영을 연기.	
문민 중기 (95.12.6 - 97.5.27)	제2국민역	문민 초기 조치 폐지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자(징유자제외)와 1년 이상 징역, 금고형 선고자 중 27세 이상으로서 대학 4년 이하 재학, 수료, 졸업한 사람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사람	병역법위반사 제외
문민 말기 (97.5.27 - 현재)	제2국민역	2년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자	89년안에서 보충역조항 추가
	보충역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자. (집행유예자 제외)	

〈 과거 양심수에 대한 군 문제 해결선례 〉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번호	서도번호
	B9	158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전화 723-6741

문서번호: 농성단 제 98-27

시행일자: 1998. 10. 27

수 신: 각 사회 민주단체

참 조: 실무자님

제 목: 강제 징집 거부와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조계사 농성 돌입!

1. 양심수 석방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회장님 이하 회원님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2.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10월 22일 대전 중앙 병무청을 항의 방문하여 병무청과 국방부의 청년 양심수들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 음모를 규탄하며 5명의 징집영장을 반납하고 양군모 회원 86명의 강제징집 거부 서명을 전달 하였습니다.

3. 본 농성단은 지난 23일 '양군모 회원에 대한 강제 징집 거부·청년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고 오늘도 농성 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 오랜 수배생활과 수감생활로 군복무의 적령기를 훨씬 넘어버린 양군모 회원들에게 정상적 사회복귀의 기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5. 양심수 군문제 해결·정치수배해제·양심수 전원석방 등의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의 문제에 귀 단체가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조 내용 : 귀 단체의 양심수 군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선전, 조계사 농성장 지지방문을 부탁 드립니다.

※ 자료 별첨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 문치웅 723-6741)

- 별첨자료 1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조계사 농성 돌입!!!!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군 입영의 적정 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 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 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군 문제 해결을 위해 98년 1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양군모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민주 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시국 관련 학생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을 촉구하고 있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양심수 문제의 완전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청년 양심수 군문제 해결에 총체적 내용을 합의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 중인 시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 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군모는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이 이들 청년 양심수들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들에게 군 징집영장을 발급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부기로 저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발상에 다른 아니라 생각하기에 이를 부당 징집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구시대적 발상과 비인권적 행위에 너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재수감을 각오하면서 영장반환 투쟁 및 강제 징집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조계사에서 청년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농성(10월 23일)에 돌입하였습니다.

청년 양심수의 군 문제 해결은 부당한 '사회적 격리'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적 복귀'를 의미합니다

청년 양심수들은 오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진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군 복무를 마치게 되면 나이 서른이 넘거나, 다 된 나이에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취업직령기를 지난 나이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게 됩니다. 김영삼정권에 의해 부당한 정치적 억압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는 사회적 생존의 권리마저 합법을 무기로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한 병역 적용에 대응하여 지난 10월 22일 대전 중앙 병무청을 항의 방문하여 11월에 징집 영장이 발부된 회원들의 영장을 반납하고 87명(양군모 대표: 문치용 외 86명) 양군모 회원들의 강제징집 거부 연서를 함께 병무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청년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은 부당한 '사회적 격리'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적 복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특권적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병역법상으로도 국민의 병역의무는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로 구분됩니다. 저희의 요구는 청년양심수들 각자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서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병역의 완전한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평등의 이념에 입각할 때도 결코 과도한 요구라 할 수 없으며, 포괄적 의미에서 국민개병제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병역법의 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더욱이 양심수 출신에게 군 생활은 기무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안기관에 계속되는 정치적 사찰과 압박의 공간으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회 격리 차원으로 이어지는 군 생활과 군생활내에서도 2중 3중의 고통을 받는 상황이 저희 양 군모 회원들로 하여금 군 징집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정권 시절에도 군입영자들에 대한 정치 사찰과 구속 수감의 존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구태의연하고 가시비끼기 아닌 시시비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 병무청 당국에 부당징집을 철회하고 영장발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청년양심수 군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의 첫걸음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로!

저희 양군모는 청년 양심수 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후 제 민주 사회단체와 더불어 정치 수배 해제, 준법 서약서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위석방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위기의 극복 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의 구시대의 법과 제도와 완전 청산되어야 하며 과거 정권으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첫걸음은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에 있음을 정부는 각인하고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양군모는 양심수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제 민주 사회단체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현 정권은 청년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하라!
- 국방부와 병무청은 청년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징집을 즉각 철회하라!
- 준법서약서 철회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 수배 해제하라!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8	156

취재요청서

수신: 가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제목: 부당징집 철회와 청년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 경위를 위한 결의대회 취재요청건
 일자: 12월 23일 낮 2시
 장소: 국방부 정문 앞 (용산구 삼각지 소재)
 발신: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
 TEL: 02) 723-6741

1. 취재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본 농성단은 '부당징집 철회와 청년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보장'을 요구하며 현재 9명이 추운 겨울날 조계사에서 61일째 (12월22일 현재) 천막농성과 30일이 넘게 국방부앞에서 매일아침(8시-9시)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 (이하 양.군.모)입니다.
3. 지난 12월 14일 국회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을 접수 시킨 바 있고 현재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집영장 발부와 관련한 입영연기 문제를 병무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 김대중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도 3백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고 2백여명이나 되는 정치수배자들이 거리를 헤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하나의 양심수문제인 군입대 적령기를 넘겨버린 양심수 출신의 4백여명의 청년들에 대한 군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강제징집만 남발하며 해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본 농성단은 현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부재와 청년양심수 군문제 해결의 실질적 담당기관인 국방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고자 민가협 회원 및 지지단체를 비롯하여 서울지역 양군모 회원들이 모여서 '청년양심수 부당징집 철회와 정상적 사회복귀 경위를 위한 결의대회'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자료 별첨 - 12월14일 국회청원 요지서

<별첨자료>

청원의 요지

-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 제 1항 제 1호와 2호는 청산되지 못한 반개혁적, 반민주적인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89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 기본틀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 조항은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반인권적 조항입니다.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통한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은 과거 모든 정권에서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실시되어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군사정권 및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양심수 - 정치수배 해제 - 군문제 해결」이라는 3가지 문제가 일괄처리됨으로써, 양심수의 실질적인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이 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 또한 이 조항은 현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이라는 기본 개혁정책 및 인권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입니다. 현 정부의 인권중시 정책은 인권보장을 통해 국민 각자가 정당한 사회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는데, 이 조항은 특히 시국관련 양심수들에게 정당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 정부' 탄생은 50년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조국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기에 그 역사적 의미와 기대는 남다를 것입니다.
2. 현재 국민들의 지지와 바람속에 전개되고 있는 새정부의 개혁의 전제이자 또다른 과제는 시국관련 수형자(양심수)에 대한 추가 사면복권, 수배해제 및 부당징집의 폐지입니다.

3. 시국관련 학생들의 군입대 문제는 94년 문민정부하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정상적 사회진출의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94년의 이러한 조치는 시국관련 학생출신들이 처한 정상적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정상적 사회진출을 통해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제조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그러나 97년에 재개정된 현 병역법 시행령은 94년에 이루어진 긍정적 조치들을 선면 무시함으로써 시국관련 학생출신들의 정상적인 사회진출 사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병역법 시행령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당징집제도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제도적 잔재일 뿐이라는 짐입니다.
5. 따라서 이들 시국관련 청년양심수들의 군문제는 단지 개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새정부가 포용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청원단체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97년 5월 27일 개정) 136조 제 1항 제 1호 및 2호를 시국관련 수행자의 사회진출 보장차원에서 이루어졌던 「88. 8. 1 - 89. 3. 24까지 시행령」과 문민정부 초기의 「94. 4 - 94. 10 까지의 시행령」에 기초하여,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실질적인 정상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치수배해제

■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내 수배해제농성단

■ 전화; 732-6880~1, 017-205-8518

■ Internet Homepage
• <http://myhome.netsgo.com/free66>

■ PC통신
• 나우-참세상 - 수배해제
• 천리안 - ncy93

양심수문제 완전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단식 6일째! (12월 10일 현재)

조계사에서 120여일 농성을 하고 있는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9명과 수배와 감옥, 다시 강제징집으로 사회격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양심수 10여명이 12월 5일부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5일부터 명동성당에 있는 준법서약서 철회를 요구하며 두달여 이상을 농성을 하고 있는 출소 양심수들도 단식에 돌입하였고 한총련단식단 30여명이 함께 결합하였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도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감옥에는 500여명에 달하는 양심수들이 찬 겨울을 동지애로 녹이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70여명에 달하는 김영삼정권하의 정치수배자들을 대표하여 9명의 수배자들이 조계사에서 120여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명의 양군모 회원들이 한 달이 넘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8.15 특별사면에서 준법서약서를 쓰고 나온 3명의 학생들이 준법서약제도 철회를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바람 부는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 인권법을 소리높이 외치면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양심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양심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15 특별사면에서 형집행 정지, 가석방 등으로 석방된 양심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며 완전히 사면·복권된 양심수는 단 1명도 없습니다.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400여명,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자 182명, 양심수 군 문제 대상자들이 400여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많은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김대중 정부는 양심수문제 해결의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법이다 인권기구 설립이다 실효성 없는 목소리만 요란합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의 모든 양심적인 단체와 사람들이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발전과 인권신장은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해제, 청년양심수 군 문제로 대변되는 양심수 문제를 완전 해결과 양심수문제의 본질적이며 법적 근원인 국가보안법 철폐부터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준법서약제도 철회하고 조건없이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 김영삼 정권하 정치수배자를 비롯한 모든 정치수배자들의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 ◆ 청년양심수의 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하라!
- ◆ 양심수 문제의 본질적, 법적 근원인 반통일·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그러나...

국가보안법 문제있다 98%, 완화·폐지해야 84%!

1.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① 아무 문제없다.(16.4%) ② 현 국가보안법 규정을 완화·폐지해야 한다.(83.6%) ③ 더 강화해야 한다.(0%)

1-1. 현행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① 전면 폐지(15.7%) ② 법조항에는 문제없고 법 적용과정에서 보다 신중(11.8%)
③ 법조항 자체에 문제, 독소조항부터 단계적 개정·폐지(58.8%)
④ 민주질서수호법 등으로 대체입법해야 한다.(10.8%) ⑤ 기타.(1%) ⑥ 무응답(1.9%)

2. 역대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이 정권 안보법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① 법 적용에 아주 문제가 많았다(58.2%) ② 일부 문제가 있었다.(40.2%) ③ 별로 문제가 없었다.(0.8%)
④ 전혀 문제가 없었다(0%) ⑤ 기타(0.8%)

3. 몇 차례 국가보안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심판재정이 있었다. 현 국가보안법이 헌법과 相衝(상충-서로 부딪힘)한다고 보는가.

- ① 상충한다.(44.3%) ② 상충하지 않는다.(41.8%) ③ 잘 모름(기타)(13.9%)

4. 금강산 관광 등 경제교류와 민간교류가 확산되는 상황에 국보법이 새 상황전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① 그렇다.(47.5%) ② 그렇지 않다.(42.6%) ③ 잘 모름(기타)(9.9%)

「NEWS+」 전국 법학교수 여론 조사



제 인권단체들의 당면 인권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동 건의안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민주와 통일을 위해 살아온 모든 이들의 인권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당면한 인권 현안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의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제 인권단체들의 당면 인권 현안에서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준법서약서를 철회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전원 석방!
3.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들 비롯한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4. 청년양심수의 군 문제를 합리적 해결과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
5. 출소한 양심수에 대한 보안관찰법을 철폐!
6.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
7. 인권탄압의 본질적, 법적 근원인 국가보안법 철폐!
8.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

■ 면담 대표 단

민주개혁국민연합 김상근, 이창복 공동대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정숙 상임대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홍근수 상임대표/ 통일시대국민회의 함세웅 상임대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권오현 공동의장/ 불교인권위 위원장 진관 스님/ 천주교 인권위 고문 김승훈 신부님/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오종렬 공동대표

양심수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선언운동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20여 사회단체 및 학생단체와 48분의 구속·수배자 부모님, 그리고 개인명의로 270여분이 선언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선언운동은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 19면 하단 전면광고로 총화되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많은 사회단체 및 각 단위 학생회와 후원회,
그리고 부모님들과 여러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부
	163



수배자가족협의회 부모님 소식

5일부터 시작된 조계사 수배해제 농성단과 양근모 농성단의 공동 단식투쟁, 그리고 명동성당 농성단과 한총련 단식단 30여명의 단식투쟁과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의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식들의 투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모님들은 12월 집중적인 수가협 활동을 결의하셨습니다.

12월 6일부터 부모님들은 3당 방문을 통한 수배해제, 사면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청 등의 항의방문과 각 언론사 방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한 민권공대위 집회, 민가협 목요집회 및 거리캠페인, 인권 영화제 등 여러 집회와 행사에 참가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실 계획입니다.

부모님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조계사에 모여서 활동을 개시하고 계시며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조계사에서 숙식하며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10여분의 수가협 부모님들이 꾸준히 활동을 벌여내고 계시며 조금씩 더 결합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10일까지 계속해서 집중활동을 벌여내실 계획입니다.



9일자 한겨레 보셨습니까?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 19면에 게재된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선언」 광고에는 여러 단체와 시민, 학생들을 비롯 기간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측에서 정부방침에 의해 범민련은 명단에 넣을 수 없으며 범민련이 명시될 경우 전체 광고를 낼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선언운동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동지적 애정과 연대, 그리고 9일 광고 총화의 약속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범민련이 제외된 광고로 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조국통일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범민련과 여러 선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을 규탄하며 민족정론지 국민주신문을 자처하는 한겨레신문이 바른 위상 찾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